社 說

학우의 삶 속에 굳건히 서길

— 한총련 출범식에 부쳐

항상 어둠과 질곡을 깨고자 노력하는 이들에 의해 역사는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우리는 지나온 시간속의 검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며칠후면 또한번 역사의 시작과 변혁을 알리는 거대는 용솟음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전대협 6년 투쟁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모든 사업의 근본을 '학우중심', '기층중심'으로 자리잡을 '제1기 한국총학생회연합회 출범식'이 9.는 27일부터 2박3일간 고려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난 3월20일 우리학교에서 열렸던 '전대협 임시총회'및 한총련(건)상임위원회'에서부터 4월28일 전북대에서 끝난 '한총련 대의원대회'때까지 한총련은 명실공히 진정한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서 학우들의 삶속에서 함께 할 그 토대를 굳건히 다져왔다.

이제 한총련은 창립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멸계만 느껴지는 전대협이 아닌 예속과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의와 애국의 양심으로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분노할 줄 아는 백만학도 그 누구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백만의 삶과 생활의 요구를 학우들 속에서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의지와 그 조직적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진정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한총련으로서 이제 소수만의 투쟁, 학우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과 삶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주적 의지를 다수의 대중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90년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의 과제가 제기되면서 과단위의 조직이 다수운동의 기초로서 그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단대단위, 지구단위의 중간단위는 기층과 상층의 매개자로 요구수렴과 지도단위로서 분명하지 못한 상황 등은 한총련이 앞으로 극복해야 한 과제로 남아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전대협의 발전적 해체가 한총련건설로 이어지면서 몇가지 풀어야 할 문제와 함께 전북대에서 있었던 '한총련 창립대의원대회'에서 '민중권력 쟁취와 한총련의 민중적 강화를 위한 준비위'측이 창립대의원대회를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등 부분적인 의견대립으로 시작부터 분파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한총련의 출범이 협의체 수준의 완전탈피와 조직력 강화및 확대 등 이전 전대협 6년 사업동안 지적된 부분적 오류, 즉 상층부중심 지도체제가 아닌 진정한 학우중심, 기층중심의 기구로서 건설되어야 한다는데 의지를 결집시켰다. 또한 가층민중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건설되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한총련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의 사상이념적 공세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개척에 있어서 자주와 자립을 삶의 신조로 단결과 단합을 삶의 방식으로 '학교사랑', '나라사랑'의 한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한총련은 더욱 굳건한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다.

망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12·12, 5·16발언에 대해

황인성총리의 돌출발언으로 시작된 12·12 논쟁이 김종필 대표위원의 5·16발언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황인성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12·12사태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불법이 아니냐"고 말한 이후 청와대측의 입장표명이 요구되기도 하여 김영삼 정부의 본질에 관한 성격규명이 군 쿠데타세력들의 사법처리가 제기되고 있다.

5·6공과의 단절은 비로 12·12쿠데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청산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영삼대통령은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를 비난하면서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3년후에 김대통령은 3당 합당을 통해 자신이 비난했던 쿠데타세력과 손을 잡았으나 현정권은 5·18을 계승한 문민정부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승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질적 논의까지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3공, 5공, 6공의 인사들이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게 된 사건이 김종필 민자당 대표의 발언이다. 16일 5·16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김영삼 정권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여권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김종필대표의 5·16에관한 그 자신이 5·16쿠데타의 주역이었다는 점과 그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5·16이후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한 현정권의 김권당 대표라는 점,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과거 역사적 과오의 청산으로 접해야 한다는 여론이 진차 강해지고 있는 때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의 돌출이 갖은 것은 '과거 정권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김영삼 정부의 선언을 뒤받침할 구체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아 정권의 성격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과거 정권의 실세들까지 뒤섞여 있는 현 정원과 구성요소로 보아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의 단절이 없이는 개혁이 더이상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12·12쿠데타에 대한 사법처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쿠데타 주역들에 대해 면죄부를 떼어줄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 진상규명의 규명된 사실과 사리에 맞는 처리만이 있을 뿐이다. 12·12쿠모자들을 쪽형사처벌할 것인지는 법률으로 하더라도 이 사태가 불법임을 법정에서 사법의 휘결로 못박지 않고서는 진정한 헌정사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매체비평

〈광 고〉

외국광고…겨레의 미까지 변질시킨다

— IBM의 외국제작광고 방송허가결정을 보고

헤드라인은 "귀하의 성공을 위하여…"

비주얼(Visual)은 황야를 걷는 코끼리 두마리.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로 카피는 시작된다.

위 광고가 요즘 광고계에서 적지않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IBM 기업이미지광고이다. 지난 4월 23일 방송위원회 광고심의 위원회로부터 외국제작광고로는 처음으로 이 광고가 허용되었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외국에서 제작된 TV 광고의 방송허용을 허용에 따른 국내 광고업계의 거센 반발과 파문을 우려, 결정을 유보했었다. 또한 광고 심의위는 지난 두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 방송은 국내외의 복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심의 규정 87조의 복제 개념을 들어 외국제작광고의 방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IBM은 이러한 판정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방송위원회 일부에서는 광고심의 위가 '복제'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다국적 기업의 지사들이 동일한 광고를 하는 것을 단순히 복제개념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당위성이 미약하다는 견해를 낳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광고심의위원회는 마침내 방송허가라는 결정을 돌연 내림 것이다.

갑작스러운 방송위원회의 입장변화에 광고계는 충격이었으며 그러한 결정이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IBM 사의 끈질긴 로비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미 통상압력에 국내광고시장이 드디어 개방화의 길로 나선 것으로 보고 위의 결정에 즉각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CF제작자들은 외국광고물의 방송이 국내에 허용된다면 국내광고업계는 더이상 설땅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문화적 역기능 또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을 주장하며 외국 CF의 국내방송은 보다 심각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내는등의 적극적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IBM의 이번광고는 홍콩의광고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제작한 기업이미지 광고로 아시아 지역 6개국에 동일하게 방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도 한국 IBM이 국내 방송절차를 밟아 마침내 국내의 전파와 인쇄매체에 모습을 드리낼 것이다.

외국광고의 국내시장 유입, 과연 이 거대한 공룡들의 태동에 우리 광고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광고계의 현실은 우수한 잠재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짧은 국내광고 실정으로서는 선진국가의 우수한 광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아직은 버겁다.

선진 광고의 표현과 기술, 신지어 전략적인 측면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미약한 경제현실에 광고산업까지도 기본적 틀이 없는 거품경제—광고가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광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한 서정성과 휴머니즘이 깃든 한국적 크리에이티브만이 외국광고와 맞서 이겨나갈수 있다. 분명 우리의 것은 소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박 용 집〈동방기획 PR부〉

일시적 진통제인 100일 계획

— 반이 지난 '신경제…' 한국경제를 살리고 있는가

지난 3월22일 공표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시한이 이제 반이상 경과하고 있다. '1백일 계획'은 7대 과제와 5개 고통분담 시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7대 과제는 △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술개발촉진 △기업 자율성 제고 △농어촌 구조개선 △생필품 가격안정 △공직자 의식개혁이고, 고통분담 시책으로는 △정부 경상비 지출 약 1조원 가량 축소 △전 공무원의 임금인상 동결 △기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상품의 1년간 가격동결 유도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 시정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 유도 △농민의 을해 추곡 수매가 인상 자제 유도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26 및 3·26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자본진영에게 총 5조1천억원 정도의 금융비용부담 경감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재정부문에서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르며, 정부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6조억 규모의 추가적인 수요확대 효과를 발생시켰다.

아울러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에 따르면 1차로 규제완화 과제로 6백70건을 확정하여 사안별로 4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추가로 2차 행정규제완화 작업에 착수하여 토지이용, 공장설립 절차, 법정외무고용에 관한 2백94건의 규제를 풀 방침이다.

지난 89년부터 한국경제는 세계자본주의의 경기순환상의 공황과 연동된 공황국면에 접어들었다. 9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수지 적자의 행진, 기업의 수익률 저하와 재고율 확대, 설비투자 부진, 제조업 고용저하와 실업률 확대, 2.8%에 불과한 작년 4/4분기 성장률 등에서 보듯이 자본의 조달—상품의 생산—가치의 실현이라는 재생산 연관의 전과정에 걸쳐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정부와 자본진영이 당면한 위기상황의 타개에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해를 가지게 됨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 '급한 불끄기'의 구체적 모색이 '1백일 계획'으로 표현된 것이다.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경제청사진의 모색은 오는 6월중에 확정 발표한다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즉 자본진영에게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예산의 축소와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동결할 정도의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노동자·농민 등 국민경제 구성원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이를 통치이데올로기화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1백일 계획'에서도 지금까지 보고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입정이나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정부 자본진영이 한국자본주의 축적 및 분배구조의 극심한 파행성을 줄여나가려는 최소한의 개혁마저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토지문제가 버리의 일상이 되어 왔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어떤 자산보다도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문제는 이윤획득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운동하게 되는 자본이 자본의 조달—상품의 생산—가치의 실현의 재생산연관에 포함되지 못하는 취약한 재생산구조로 인하여 생산요소가 아니라 자산증식용 수단으로서의 토지의 구매에 사용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금융개혁문제도 자금이 진정으로 제 때에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형화·종합화라는 금융산업 개편이나 알맹이 빠진 자율화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과 금융실명제의 실현을 통해서만 담보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도입문제는 정부 자본진영의 현실적 우려처럼 기업자금의 영세이라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그나마 정상적인 자본주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한국자본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폭과 깊이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국제분업질서내에서 지워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주력산업의 육성과 제1부문 및 제2부문의 고정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갱신과 기술축적 그리고 국내 시장의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이윤실현이나 수치상의 성장보다는 산업부문기업간의 질서개편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독점자본위주의 파행적이고 왜곡된 축적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공급 및 규제완화에만 점이 맞춰지고 있는 '1백일 계획'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그칠 것이다.

아울러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등 최소한의 개혁마저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를 낳는다. 또한 자금공급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동반한 인플레, 오히려 축소된 사회복지정책 속에서 강요되고 있는 민중부문에 대한 고통분담은 사실상 고통전가에 다름 아닐 것이다. 결국 신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란 자본진영에는 지원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축적의 기회를 민중진영에게는 생활상의 고통과 압박으로 예고하는 것이다.

독점자본에 대한 구조개혁은 뒷짐

자본가엔 축적기회, 민중엔 생활고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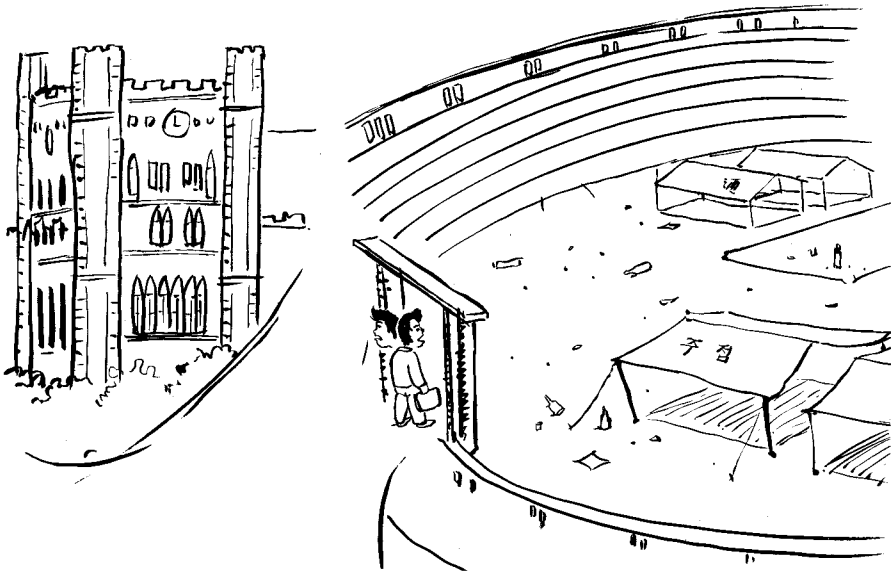
소 문 상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연구원〉

(고) (황) (만) (평)

이제 같이 갑시다

대학주보 기획광고〈1〉 도서관을 찾읍시다



"주점은 여기였는데 도서관은 어디지?"

○○과 1학년인 가마귀군은
대동제다 동문회다 하며
지난 주 내내 술독이 빠져 살았습니다.
가마귀군은 월요일부터 공부를 각오하여
아침에 도서관에 가려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대운동장에 다와서
멈추었습니다.
"어, 주점은 여기였는데
도서관은 어디였지?"
아직 술이 덜 깨었는지,
아니면 이 학교 학생이 아니었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마귀군은 다시 교문으로 내려가
입학하러 오던 날의 각오로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대 학 주 보 사